

환경부, 환경측정 분석사 자격증 신설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등 9개 분야의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관리되고, 환경부장관이 부여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과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질오염물질, 실내공간 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하거나 공표할 경우 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측정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측정업무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오염 등과 관련해 환경측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측정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령 마련으로 측정·분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관련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 발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시설로 바꾸어 가기 위해 폐기물분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한편, 이를 지자체 등에 보급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사가 설립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조사연구사업은 총 95건으로, 폐기물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이 33건,

수도권매립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30건, 폐기물 자원화 등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개발연구'가 10건 등이며 2006년에도 총 18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새로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연구사업중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특허 출원 및 등록, 신기술 지정 등으로 이어져 공사가 명실상부한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은 모두 10건으로 폐기물 매립분야 6건, 침출수처리분야 3건, 폐기물자원화분야 1건이고 올해에도 매립장 중간복토 관련 특허 1건을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며, 공사에서 개발한 침출수 고도처리기술이 2005년 9월 "환경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이런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시·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전시, 전주시, 의령군 등의 매립지를 현장 방문하여 기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자문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큰 환영을 받는 한편, 매년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산업·기술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의 종합적인 정보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매립심포지엄(APLAS) 등 국제학술대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환경부, 하수관거 BTL사업 착공으로 민간 자본 본격 투자 전망

환경부는 '05년부터 추진해온 17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중 김해시 사업이 지난 1월 19일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됨으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서막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 BTL(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는 방식

지난 2001년에 환경부는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 166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가 평균 8.6m마다 1곳이 부실하며, 하수관내 유량의 약 30%가 외부 침입수로 추정되었으며, 부실하수관거 정비 및 신규 하수관거 설치 등 2020년까지의 정비소요를 감안할 때 약 3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부실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여 하수관거의 기능을 되살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수관거 재정사업(국고보조)과 병행하여 BTL방식으로 '05년부터 '07년까지 3개년간 5조6천억 원을 투자, 하수관거 8,824km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05년에는 김해, 목포, 논산 등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조원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환경부, 해당 시·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사업자 선정, 협상 및 협약체결 등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해시, 목포시를 시작으로 나머지 15개 시군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착공계획이 확정된 김해시와 목포시는 각각 지난해 12월 30일과 12월 29일에 '가칭' 푸른김해지킴이(주)(주간사: (주)대우건설)와 총민간사업비 851억원에,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가칭' 푸른목포환경(주간사: 금호산업(주))과 523억원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민간자본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Fast-Track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착공초기에 공정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하수관거정비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공사준공이후 20년간 운영·관리의 책임을 주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점목함으로써 하수관거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Fast-Track: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을 하면서 나머지 시공분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

'06년에는 '05년 보다 크게 증가된 2조 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29개 지자체에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시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고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하수관거 BTL사업은 '07년까지 총 5조6천억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이후에는 하수관거보급율이 75%('04년 6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로드맵' 수립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환경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78년 창립이래 답습해온 환경기준개발, 시험법개발, 단순한 오염현황 조사수준의 연구활동에서 벗어나 실용적 연구다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지도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과학원의 환경연구 로드맵은 환경질 분석·평가, 환경보전, 자연생태, 시험·검사 선진화, 지구환경, 교통환경 등 7대 분야를 대상으로 22개 중분야, 72개 중과제, 214개 세부과제 및 387개 연구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70%는 로드맵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나머지 30%는 환경부 요구과제와 현안과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연구해나감으로써 중복·반복연구, 계속과제 형식의 연장연구, 제자리뛰기식의 답보연구와 같은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연구 로드맵에 따라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진도관리 하게 됨으로써 고객만족·성과지향적 우수연구에 경쟁적으로 몰입케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과학원은 기대 하고 있다.

환경부, 「실내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환경부는 국민의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실내 공기질 관련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실내공기질 전용 홈페이지인 「실내환경정보센터 (<http://iaqinfo.nier.go.kr>)」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실내환경정보센터」는 올해 4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완성 하였고,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시범운영('05. 9~12월)을 거쳐 지난 1월 1일 정식으로 운영됐다. 「실내환경정보센터」는 일반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메뉴체제로 제작 되었으며, 크게 「실내공기 환경」, 「실내공기 관리방안」, 「관련기준 및 제도」,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공기 환경」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중요성, 주요 실내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인체 영향, 주요 오염물질 발생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내공기 관리방안」은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 오염원 제거 및 관리수단, 실내공기질을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스스로 실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준 및 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정책, 법령, 기준 등을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의 기준, 제도 등도 함께 소개하여 국제적인 동향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실」에는 정부정책, 법령,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DB화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련 보도자료,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FAQ 등 게시판도 운영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교부,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 계획

건설교통부는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하여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새차증후군'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실내공기질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05. 5~12월까지 승용차 7종 및 대형승합차 2종 등 총 9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승용차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국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차종에서 에틸벤젠이 동 권고기준보다 1.65배, 자일렌이 1.31배로 나타났으며, 대형버스의 경우는 6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동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등을 추가 연구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새차증후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 휴식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문개폐로 환기가 대체로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일부항목이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체에 주요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갈수록 현대인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및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 접착제, 도료 등에 대해 금년도에 추가로 조사·연구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특성을 감안한 국내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새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인수초기 90일 이내에는 환기 등 실내공기 관리요령에 따라 유해물질이 승객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자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4,095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4,0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05년 3,242억원 대비 2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244억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용자 1,213억원, 그리고 발전차액 263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 부문은 상업용 연료전지, 태양전지소재 양산기술개발,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작년대비 32.3%증액된 1,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490억원, 보급보조사업 28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30억원 등 작년대비 48.9%증액된 1,3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급용자 부문에는 작년대비 3.7% 증액된 1,213억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대비 26.4% 증액된 26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 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특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작년 2,886억원보다 줄어 들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작년 355억원보다 대폭 증액되었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03. 12월)를 수립한바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시 1,193억원이었던 예산규모를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

(3년간 연평균 52%)시켜 '06년에는 4,09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549억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理事長 金均燮)은 오는 2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으로 전년도 대비 59억이 증가된 총 6,549억원을 용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3~5%대의 대출이자율로 최소 8년부터 최대 15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사용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자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공공기관, 비영리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10%가 많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의 부담없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ESCO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237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며, 그 중 중소 ESCO사업자들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7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그밖에도 온실난방시스템 등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신규설비를 자금지원대상시설에 추가하고 최근 5년간 자금지원 실적이 낮은 설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지원의 성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자금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단열개수 사업 시공확인 기관을 기존의 지자체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관할 지사로 변경하며, 기존에 시공완료 후 자금을 신청토록 하였던 소형 빙축열 설비에도 다른 설비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착수 후 신청토록 변경하였다. 자금신청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인은 접수된 자금신청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